

이달의 초점

지역 인구변화의 다층적 이해와 과제

지역 인구변동의 주요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 장인수 |

생애주기 사건과 지역 이동: 대학 진학, 취업, 결혼을 중심으로

| 이지혜A |

생활권 이동과 지자체 정책 체감

| 고제이 |

인구이동과 정주여건

| 강지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생활권 이동과 지자체 정책 체감¹⁾

Multilocality and the Perceived Impact of Local Policies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지역 인구변화와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 조사’를 통해 지역 간 생활권 이동이 활발해지는 환경에서 주민의 지자체 정책 인식과 이용, 생활권을 반영한 복수 주소 허용 등과 같은 새로운 행정제도 도입에 대한 수용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지자체가 시행하는 인구·복지 정책에 대한 높은 인지도에 비해 이용률은 낮았다. 지원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 또한 주민들의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권 이동 경험은 지자체 사업에 대한 인지, 이용, 체감 수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정기적으로 생활권을 이동하는 집단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 정책에 대한 인지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지리적 이용 기반을 갖는 서비스 접근에 일정 정도 제약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등록 주소지 기반의 행정서비스는 생활권 범위를 고려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지자체 정책에 대한 접근성과 체감에 지속적인 왜곡을 발생시키는 만큼 주민의 실생활 범위를 고려한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요구된다.

1 들어가며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지역 인구 감소와 동시에 통근, 통학,

문화활동이나 쇼핑, 의료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생활하는 지역 간의 괴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생활권 이동성 확대는 현행 등록 주소지 중심의 행정이 실제 주민들의 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1) 이 글은 고제이. (2025. 12. 11.). 지역 인구변화 속에서 본 지자체 정책 체감과 복수주소제 인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41회 인구포럼-지역 인구변화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 방향)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표 1] 실거주지 신청 사회보장급여 월별 확대 내역

시행월	적용 급여
2024. 1.(13개)	① 영유아보육료지원, ② 가정양육수당, ③ 유아학비, ④ 아이돌봄서비스, ⑤ 부모급여, ⑥ 아동수당, ⑦ 기초연금, ⑧ 장애인연금, ⑨ 장애수당, ⑩ 장제급여, ⑪ 해산급여, ⑫ 긴급복지, ⑬ 장애아동수당 현실화에 따른 지방재정 안정성 강화
2024. 4.(12개)	① 생계급여, ② 의료급여, ③ 주거급여(국토부), ④ 청소년특별지원, ⑤ 한부모가족지원(여가부), ⑥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여가부), ⑦ 차상위계층확인, ⑧ 차상위본인부담경감, ⑨ 차상위자활급여, ⑩ 복지대상자요금감면(산업부, 방통위, 과기부), ⑪ 교육급여(교육부), ⑫ 초·중고 학생교육비지원(교육부)
2024. 10.(5개)	①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여가부), ② 가사간병방문지원, ③ 첫만남이용권, ④ 전국민마음투자지원, ⑤ 자산형성지원

출처: “주민등록지가 아니더라도, 실거주지 어디서나 사회보장급여 신청가능-‘실거주지 신청제도’ 30개 급여로 복지혜택 확대, 국무조정실 베스트 사례 선정”,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24. 11. 25,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83705&tag=&nPage=27

우려를 넣고 있다. 이에 정책 논의에서도 확장된 실제 생활권 범위를 고려한 행정서비스 개선이나 복수 주소 허용과 같은 제도적 접근까지 검토되고 있다. 관련해서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2024년부터 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30개 급여에 대하여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니라 생활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실거주지 신청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권 이동성 확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 설계와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전국 지자체는 인구 감소 위험을 기관의 존립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여 출산·양육 지원, 청년 지원, 노인 지원, 전입·정착 지원 등 다양한 인구·복지 정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이러한 지자체 사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용하고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토는 부족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2025년 11월 실시한 ‘지역 인구변화와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지자체 정책사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생활권 이동 경험이 정책 체감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 조사 개요

‘지역 인구변화와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조사’는 조사전문업체인 엠브레인을 통해 2025년 11월 11~17일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한 온라인 패널 조사로 수행되었다. 조사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69세 남녀 5000명으로 주민등록인구통계에 기초한 17개 시도 내 성·연령 인구 비례 표본을 할당하였고, 주요 인구학적 변수인 혼인 상태, 경찰 유무, 동부·읍면부 등을 추가 변수로 활용하여 안정

적인 표본 수 확보와 집단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조사 내용은 크게 인구구조 변화 및 지역 인구 정책, 지역 자체 사업 및 복수 주소제 인식, 지역의 근린환경 및 생활 정주 여건, 지역 내 이웃 관계 4개 영역과 응답자 일반 특성 총 5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지역 자체 사업 및 복수 주소제 인식 영역의 설문 항목은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는 정책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 파악을 목적으로 중앙정부 사업과의 구분 능력, 지자체 사업 인지 여

부, 이용 경험과 이용자의 만족도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자체의 지원 수준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주변 지자체와의 비교 인식과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원 수준 인식을 같이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생활권 이동 경험과 복수 주소 허용 등 최근 생활인구 개념을 고려한 제도적 접근에 대한 찬반 의견, 우려 사항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문을 구성하였다. 조사 응답자의 일반 특성과 거주지 외 지역 생활 빈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지역 인구변화와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 조사 응답자 특성 및 거주지 외 지역 생활 빈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매주 1일 이상 정기적으로 타 지역에서 생활한다	매월 1일 이상 정기적으로 타 지역에서 생활한다	명절, 휴가, 제사 등 필요시 가끔 한다	전혀 하지 않는다	계
전체		(5000)	30.6	11.0	27.4	30.9	100.0
성별	남성	(2544)	34.8	11.6	25.9	27.7	100.0
	여성	(2456)	26.3	10.4	29.0	34.3	100.0
연령	만 19~29세	(835)	34.8	14.1	26.0	25.2	100.0
	30대	(901)	37.0	11.3	28.6	23.1	100.0
	40대	(1028)	31.2	11.3	31.1	26.3	100.0
	50대	(1170)	31.9	9.4	26.1	32.7	100.0
	60대	(1067)	20.1	9.8	25.5	44.6	100.0
거주지 (시/도)	서울	(941)	32.9	12.0	26.9	28.1	100.0
	부산	(311)	18.5	9.9	32.3	39.2	100.0
	대구	(229)	16.6	12.1	29.7	41.7	100.0
	인천	(305)	37.3	8.7	26.2	27.7	100.0
	광주	(136)	16.2	10.3	40.3	33.2	100.0
	대전	(143)	18.3	11.4	34.9	35.4	100.0
	울산	(109)	17.0	11.1	39.5	32.5	100.0
	경기	(1367)	46.6	9.7	21.1	22.6	100.0
	강원	(142)	14.1	13.3	29.0	43.6	100.0
	충북	(153)	21.7	15.7	28.1	34.5	100.0

[표 2] 계속

구분		사례 수	매주 1일 이상 정기적으로 타 지역에서 생활한다	매월 1일 이상 정기적으로 타 지역에서 생활한다	명절, 휴가, 제사 등 필요시 가끔 한다	전혀 하지 않는다	계
	충남	(202)	21.4	12.9	29.9	35.8	100.0
	전북	(159)	20.7	8.7	29.4	41.2	100.0
	전남	(161)	26.4	15.3	23.6	34.7	100.0
	경북	(233)	18.6	9.7	33.2	38.4	100.0
	경남	(306)	22.8	12.6	31.0	33.6	100.0
	제주	(63)	11.3	9.9	31.8	47.0	100.0
	세종	(37)	38.4	8.6	27.7	25.3	100.0
거주지 (읍/면/동)	읍	(609)	31.7	9.3	28.6	30.4	100.0
	면	(281)	23.9	19.4	23.3	33.4	100.0
	동	(4110)	30.6	11.0	27.4	30.9	100.0
거주 기간	3년 미만	(728)	38.8	12.4	25.6	23.3	100.0
	3~5년 미만	(474)	35.0	13.5	28.0	23.5	100.0
	5~10년 미만	(766)	33.1	14.7	29.4	22.9	100.0
	10년 이상	(3032)	27.4	9.4	27.3	36.0	100.0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128)	22.9	9.1	28.3	39.6	100.0
	전문대졸	(707)	27.7	12.1	22.8	37.4	100.0
	대졸	(2675)	33.6	11.3	28.5	26.5	100.0
	대학원졸	(490)	36.1	11.9	26.0	26.0	100.0
혼인 상태	미혼	(1694)	34.3	12.5	24.7	28.4	100.0
	유배우	(2852)	29.6	10.2	30.0	30.3	100.0
	이혼/사별	(453)	23.3	10.7	21.5	44.5	100.0
자녀 수	0명	(2081)	34.5	11.8	25.5	28.3	100.0
	1명	(951)	32.3	10.7	27.5	29.5	100.0
	2명	(1679)	25.5	10.6	29.2	34.8	100.0
	3명 이상	(290)	27.2	9.3	30.9	32.6	100.0
경제활동 여부	경제활동	(3730)	36.8	11.3	26.3	25.6	100.0
	비경제활동	(1270)	12.5	10.2	30.6	46.7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356)	16.2	11.0	24.1	48.7	100.0
	200만~300만 원 미만	(566)	26.0	11.1	25.0	38.0	100.0
	300만~500만 원 미만	(1356)	28.5	11.6	27.7	32.2	100.0
	500만~700만 원 미만	(1296)	30.9	11.0	28.5	29.5	100.0
	700만 원 이상	(1426)	37.8	10.4	28.0	23.9	100.0

출처: “지역 인구변화와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11.

2 지방자치단체 정책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과 지원 수준 체감도

가. 정책사업 시행 주체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21.5%만이 중앙정부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민 대다수는 정책의 시행 주체를 명확하게 식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상당수 지자체 사업이 중앙정부 사업과 비슷한 명칭으로 시행하고, 급여 내용과 지원 수준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 형태를 취함에 따라 정책 대상자나 수급자가 별도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사실상 구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사업 시행 주체에 대한 구분은 응답자의 특성, 특히

생활권 이동 경험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기적으로 생활권을 이동하는 집단(매주 1일 이상 및 매월 1일 이상 정기적으로 타 지역에서 생활)의 구분 능력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1.3배 높게 나타났다. 비이동·비정기 이동 집단은 고령층,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업무나 학업 수행 등 일상적인 지역 간 이동이 적어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연령이나 성별과 같은 인적 속성 자체보다는 생활권 이동 경험 등을 통한 정보 접근성이 사업 시행 주체에 대한 식별 능력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표 3] 지자체 사업 구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로지트 분석 결과)

변수	OR(승산비) ²⁾	p-value ³⁾
30대(20대=기준)	0.68	0.003
40대	0.67	0.001
50대	0.61	<0.001
60대	0.46	<0.001
여성(남성=기준)	0.58	<0.001
석사 이상(중졸 이하=기준)	7.70	0.051
소득 4분위(1분위=기준)	1.24	0.058
정기적 생활권 이동	1.30	0.001

주: 1) 종속변수는 응답자가 중앙정부 사업과 거주지역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을 얼마나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여 구성함.

2) 원 응답범주는 '전혀 구분하지 못한다/잘 구분하지 못한다/보통이다/대체로 잘 구분한다/매우 잘 구분한다/잘 모르겠다'로 구성됨.

3) 이중 '대체로 잘 구분한다'와 '매우 잘 구분한다'를 1, 그 외 응답을 0으로 재분류하여 로지트분석을 실시함.

4) OR>1은 증가, OR<1은 감소를 의미함(n=5000).

출처: "지역 인구변화와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11.

2) 계수의 지수값으로 제시된 승산비(OR: odds ratio)는 특정 요인이 결과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의 크기와 방향을 보여주는데, 1보다 크면 가능성이 높고, 1보다 작으면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3) p-value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0.05 미만일 때 유의한 것으로 해석한다.

나. 지자체 사업 유형별 인지도와 이용 경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사업 유형에 따라 차이가 확인된다. 출산축하금이나 지자체 다자녀 카드와 같은 출산·양육 지원, 지역형 청년 통장 사업 등 청년 지원, 노인수당, 어르신 돌봄·교통 지원 등 노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알고 있었지만, 전입·정착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

다. 전입장려금 지급, 이사비 지원 등 전입·정착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을 구분해 보아도 다른 사업 영역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데, 모든 지자체에서 해당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관련 지자체 사업의 이용 경험은 인지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한 이용률은 사업 유형별로 4%에서 18% 수준에 분포한다. 정책 대상이 아니라는 응답

[표 4] 지자체 사업 유형별 인지도

(단위: 명, %)

구분	전체 인지도(n=5000)	읍·면 인지도(n=890)	동 인지도(n=4110)
출산·양육 지원	71.4	70.7	71.5
청년 지원	68.9	62.5	70.0
노인 지원	65.0	65.2	64.9
전입·정착지원	32.0	37.0	31.2

- 주: 1) 응답자 거주지역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에 대한 인지도 여부를 조사한 결과임
 2) 중앙정부 사업은 제외하고 응답하도록 안내하였고, 응답은 '들어 본 적 있다/ 잘 모르겠다/ 들어 본 적 없다' 로 구성됨.
 3) 출산·양육 지원(출산지원금, 다자녀 지원 등), 청년 지원(주거·교통·자산형성 등), 노인 지원(교통·돌봄·문화 등), 전입·정착지원(전입장려금, 이사비 등)에 대해 '들어 본 적 있다' 응답 비율만 제시함.

출처: "지역 인구변화와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11.

[표 5] 지자체 사업 유형별 이용률

(단위: 명, %)

구분	전체 이용률	적용 대상자 이용률('대상 아님' 응답 제외)
출산·양육 지원	17.5	46.0
청년 지원	15.8	34.7
노인 지원	10.0	30.0
전입·정착 지원	4.0	10.6

- 주: 1) 응답자 거주지역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에 대한 이용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임.
 2) 출산·양육 지원(출산·양육지원금, 다자녀카드, 산후 돌봄 지원 등), 청년 지원(주거·교통·문화·자산형성 등), 노인 지원(노인수당, 교통비, 돌봄·문화 지원 등), 전입·정착지원(전입장려금, 이사비 등)을 포함함.
 3) 응답은 '이용함', '이용 안 함', '해당 없음(대상 아님)'으로 구분하였으며, 표에는 '이용함' 응답 비율만 제시함.

출처: "지역 인구변화와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11.

을 제외하면 이용률이 크게 높아지나 여전히 정책 대상자의 절반 미만 수준에 머무른다. 특히 전입·정착 지원은 대상자의 10.6%, 해당 지역에 5년 미만 거주자 중 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시행하는 정책의 이용률이 지원 대상의 절반 이하에 머무르고 있는 것에는 지원 대상 요건이나 신청 절차, 정보 전달 방식 등 지자체 사업 별로 다양한 제약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실제 지자체 사업 이용 경험이 있는 주민들은 4개 사업 유형 모두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50% 내외였고, 불만이라는 응답은 10% 내외였다. 즉, 지자체 사업 자체의 품질은 양호하지만, 접근성 측면에서 일정 정도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 지자체 지원 수준에 대한 주민 체감

지자체의 지원 수준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 지자체의 지원 수준과 본인 거주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라는 두 가지 비교 기준을 제시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조사 결과 주민 상당수는(41~46%) 현재 지원 수준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거나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평균적이라고 생각하며, 지원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도 26.1~28.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민 대다수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지원 수준이 높다고 느끼지 않음을 보여 준다.

지원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면 지원 금액이나 혜택 부족을 가장 큰 불만으로 지적하였다(30.3%). 이어 지원 대상의 한정성(26.3%)과 정보 부족(21%), 지원 종류의 부족(20.6%)을 지목하였다. 신청 절차와 관련해서는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원 수준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도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확인된다. 지원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에서 가장 높았다(29%).

[표 6] 지자체 지원 수준에 대한 주민 체감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매우 낮다	다소 낮다	비슷하다	다소 높다	매우 높다	잘 모르겠다	계
주변 지자체와 비교 시	(5000)	5.4	23.4	41.4	13.8	4.6	11.3	100.0
거주 지자체 재정 여건 대비	(5000)	4.8	21.3	45.9	12.0	4.2	11.9	100.0

Q. (외부 비교) 귀하가 체감하기에 귀 지자체(시군구)의 지원 수준은 주변(인접·생활권) 지자체와 비교해 어느 정도입니까? 이때의 지원 수준은 지자체가 주민의 복리를 위해 지원하는 현금 및 서비스 지원(예: 출산지원금, 교통패스, 장수수당, 전입장려금 등)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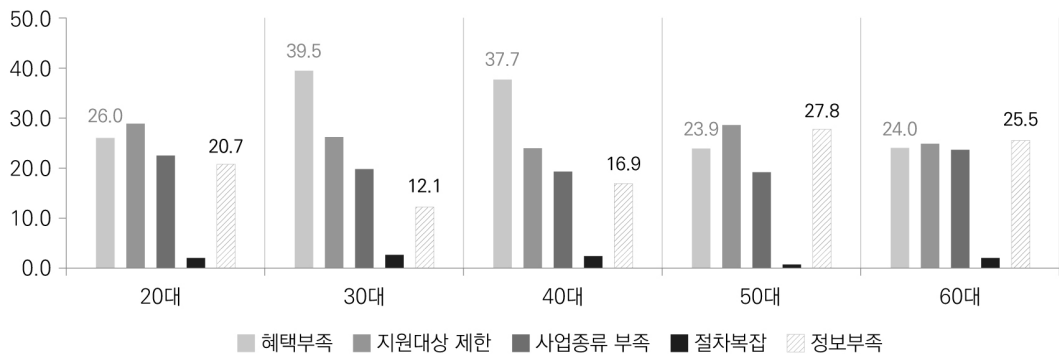
Q. (재정 여건 대비) 거주하고 계시는 지자체(시군구)의 재정 여건(세수 규모, 교부세 의존 등 살림살이 형편)을 고려할 때, 귀 지자체의 지원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때의 지원 수준은 지자체가 주민의 복리를 위해 지원하는 현금 및 서비스 지원(예: 출산지원금, 교통패스, 장수수당, 전입장려금 등)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출처: “지역 인구변화와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11.

30~50대에서는 ‘낮다’ 비중이 31~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0대에서는 정보 부족으로 판단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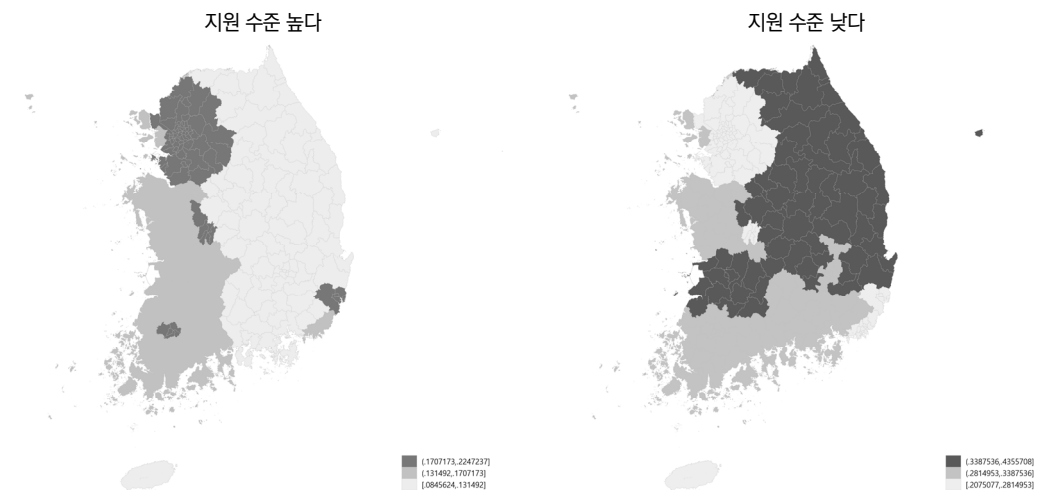
로 불만족 이유도 다소 다르게 지적되었는데, 30·40대에서는 ‘혜택이 너무 적다’는 불만이 가장 많았고, 50·60대에서는 ‘정보 부족’과 ‘사업 종류

[그림 1] 연령별 지자체 정책 불만 요인



주: 지원 수준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낮다’ 응답 기준.
출처: “지역 인구변화와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11.

[그림 2] 지역별 지원 수준 인식



주: 주변 지자체와 비교 시 지원 수준에 대한 응답 기준.
출처: “지역 인구변화와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11.

부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지역별로도 지원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조금 달리 나타난다. 지원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전체적으로 낮은 편(8.5~22.5%)인데, 서울, 경기, 울산, 대전 등 대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더 좋은 평가가 이루어졌다. 전북, 강원, 충북, 경북 지역의 군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 수준이 '낮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3 생활권 이동성과 정책 인식

가. 생활권 이동자의 정책 인식

생활권 이동성을 살펴본 결과 상당수 주민이 등

록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생활하는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나 학업 등을 위해 매월 1일 이상 정기적으로 주소지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생활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1.6%이다. 명절이나 휴가 등 비정기 이동까지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의 약 70%가 주소지와 생활지가 분리된 경험을 갖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생활권 이동성은 개인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주로 20~40대 경제활동인구에서 이동성이 높았고, 교육 및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이동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서 정기적 이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2).

앞에서 매주 1일 이상 및 매월 1일 이상 정기적으로 타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중앙정부 사

[표 7] 생활권 이동 집단별 지자체 사업 인지도

(단위: %)

구분	응답	비이동/비정기 이동	정기 이동	p-value
출산·양육 지원	들어 봤다	72.6	69.7	0.048
	잘 모르겠다	21.8	25.1	
	들어 본 적 없다	5.6	5.2	
청년 지원	들어 봤다	68.5	69.3	0.410
	잘 모르겠다	23.6	22.1	
	들어 본 적 없다	7.8	8.6	
노인 지원	들어 봤다	66.6	62.6	0.033
	잘 모르겠다	25.4	28.6	
	들어 본 적 없다	8.0	8.7	
전입·정착 지원	들어 봤다	31.3	33.1	0.480
	잘 모르겠다	42.9	42.3	
	들어 본 적 없다	25.8	24.7	

주: 열비율, svy 가중치 적용. 정기 이동 집단은 통근, 통학 등 주요 활동을 위하여 매주 1일 이상/매월 1일 이상 타 지역에서 생활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의미함.

출처: "지역 인구변화와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11.

업과 지자체 사업을 더 잘 구분하는 경향이 나타나 는 것을 보았다. 이는 다른 지역을 오가면서 다양한 사업이나 정책을 접하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정착 본인 거주지 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인지 여부는 지자체 사 업 유형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출산· 양육 지원과 노인 지원의 경우 정기적 생활권 이동 자 집단에서 ‘들어 봤다’는 비율이 더 낮고, ‘잘 모 르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청년 지원과 전 입·정착 지원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정보 접근 기회를 갖는 정기적 이동 집단이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을 더 잘 구분할 수 있지만, 정착 본인 이 살고 있는 지자체에서 어떤 정책사업이 시행되 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보 파악이 제한되어 불확 실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의 해당 지자체 사업 이용 여부를 보 면 일부 사업 유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는데, 출산·양육 지원의 경우 정기 이동자의 이용률은

42.4%로 비이동·비정기 이동자(49.1%)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p < 0.01$). 반대로 청년 지원에서는 정기 이동자의 이용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p < 0.05$). 전입·정착 지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률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정기 이동자 집단에 서 더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p < 0.05$). 젊은 남성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은 정기 이동 집단의 특성 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예 컨대 생활권 이동이 잦은 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시 간 제약 등으로 출산·양육 관련 지역 기반 서비스에 대한 신청이나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반면 청년 지원이나 전입·정착 지원과 같이 온라인 신청, 자격 확인 요건 등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이 용이 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생활권 이동은 지자체 정책에 대한 인지와 이용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 다. 특히 출산·양육 지원이나 노인 지원 등 지역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서는 정기 이동 집단에

[표 8] 생활권 이동 집단별 이용률

(단위: %)

구분	비이동/비정기 이동	정기 이동	p-value
출산·양육 지원	49.1	42.4	0.009
청년 지원	32.5	37.3	0.035
노인 지원	30.6	29.0	0.528
전입·정착 지원	9.1	12.2	0.041

주: 지원 대상자 기준, svy 가중치 적용. 정기 이동 집단은 통근, 통학 등 주요 활동을 위하여 매주 1일 이상/매월 1일 이상 타 지역에서 생활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의미함.

출처: “지역 인구변화와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11.

[표 9] 생활권 이동 집단별 복수 주소제 찬반

(단위: %)

구분	비이동/비정기 이동	정기 이동	p-value
반대	13.6	10.0	0.000
찬성	39.3	52.9	
중립·유보	47.0	37.0	

주: 지원 대상자 기준, svy 가중치 적용. 정기 이동 집단은 통근, 통학 등 주요 활동을 위하여 매주 1일 이상/매월 1일 이상 타 지역에서 생활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의미함.

출처: "지역 인구변화와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11.

서 정책 인지도와 이용률 모두 낮게 나타난다. 이에 반해 청년 지원이나 전입·정착 지원과 같이 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온라인 등을 통한 접근성이 높은 사업 영역에서는 정기 이동 집단의 이용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생활권 이동이 활발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현행 등록 주소지 중심 행정이 일부 집단의 서비스 접근을 체계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을 보여 준다. 결국 주민의 실제 생활권 범위와 등록 주소지 기준 행정서비스 제공 간의 괴리가 정책에 대한 인지와 이용 그리고 체감 전반에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응하여 최근에는 복수 주소 허용과 같은 제도적 접근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관련 제도에 대한 일반 주민의 수용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나. 복수 주소제에 대한 인식

예상과 같이 복수 주소제에 대한 인식은 생활권 이동 경험과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복수 주소제 등

실생활 인구를 고려한 제도 도입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찬성 비율은 약 45%, 반대 의견은 약 12% 수준으로 대체로 긍정적이다. 특히 정기 이동 집단의 찬성 비율은 52.9%로 이동이 없거나 비정기적 이동자 집단에 비해 13%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나 생활권 이동이 많은 사람일수록 현행 등록 주소지 기반 서비스의 한계를 체감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도적 대안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복수 주소제 도입 시 기대하는 효과로는 '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많이 언급되었다. 반면 제도 남용 가능성이나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함께 지적되었다.

4 나가며

지금까지 생활권 이동 범위가 확대되는 환경에서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인구·복지 사업에 대하여 얼마나 인식하고 체감하

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나 실제 이용률은 낮게 나타났다. 지원 수준에 대한 평가 또한 주민들의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원 대상이나 혜택의 한정성과 같은 사업 내용 이외에 정보 접근의 제약도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생활권 이동 경험이 지자체 정책 인식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정기적으로 다른 지자체를 오가는 집단은 지자체 정책과 중앙정부 정책을 구분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정착 본인이 속한 지자체 사업에 대한 인지는 불확실하였다. 출산·양육 지원과 같이 지리적 이용 기반을 갖는 서비스 접근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제약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활권 이동성이 큰 20~40대 경제활동인구는 지자체 정책을 더욱 뚜렷이 구분하며, 현행 주소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한계를 보다 강하게 느끼고 복수 주소제 도입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용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민 10명 중 4명은 주소지와 생활지가 분리되어 있으며, 7명은 휴가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등록 주소지 중심의 행정은 이같이 확장하고 있는 생활권 범위를 고려하지 못하며, 그 결과 지자체 정책에 대한 접근성과 체감에 지속적인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생활권 이동성이 경제사회의 변화와 맞

물려 앞으로 계속 커질 수 있는 만큼 주민의 실제 생활권을 반영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고제이. (2025. 12. 11.). **지역 인구변화 속에서 본 지자체 정책 체감과 복수주소제 인식** [발표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41회 인구포럼, 서울.
- 보건복지부 (2024. 11. 25.). **주민등록지가 아니더라도, 실거주지 어디서나 사회보장급여 신청가능-‘실거주지 신청제도’ 30개 급으로 복지혜택 확대, 국무조정실 베스트 사례 선정** [보도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11.). **지역 인구변화와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조사**.

Multilocality and the Perceived Impact of Local Policies

Ko, Jaye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n light of increasing multi-local living, this study investigates residents' awareness and utilization of local public assistance, as well as their acceptance of alternative institutional arrangements, such as the recognition of multiple addresses. The analysis draws on data from the "Survey of Perceptions of Local Population Change and the Perceived Impact of Local Population Policy." The findings suggest that, although awareness of local population and welfare policies is widespread among residents, actual utilization remains limited. Respondents frequently perceived the level of public assistance available in their local areas to be lower than that provided in other municipalities. Meanwhile, multi-local living was found to shape residents' awareness and utilization of local programs, as well as their perceptions of program effectiveness. Individuals who regularly move between two or more residences were less aware of assistance programs provided in the locality where their permanent addresses were registered and were more likely to face constraints in accessing services tied to that location. Because the administration of local public assistance remains based on registered residence, it fails to account for the needs arising from the rise of multi-local living, leading to distortions in both access to, and perception of the effectiveness of, local government services.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ed to consider how administrative services should be designed and delivered so that they better reflect the realities of multi-local residence.